

한국 정치사회의 통일노선 계보: 지속과 변화⁺

엄상윤*

- I. 서론
- II. 해방기: 통일노선의 원형 정립
- III. 냉전기: 통일노선의 구체화와 희망성쇠
- IV. 탈냉전기: 통일노선의 실천성 강화
- V. 21세기: 통일노선의 유형 변화와 수렴 추세
- VI. 결론

주제어: 통일노선, 계보, 보수, 진보, 정치사회

|국문초록|

본 연구는 다양하고 복잡한 통일노선들을 단순 유형화하는 작업을 통해 해방기부터 현재까지 한국 정치사회에 등장한 각종 통일노선의 계보를 시론적·총론적·통시적 차원과 지속과 변화의 관점에서 규명하고 향후의 통일노선 정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일노선의 원형들은 해방기에 임시정부수립 노선을 둘러싸고 3개의 정파에 의해 4개의 유형, 즉 I 유형(친미·반소 외세의존형, 우파), IV유형(반미·친소 외세의존형, 좌파), V유형(친미·친소 내외 세력충형, 중간파), V-2유형(반미·반소 내세의존형, 중간파)으로 정립되었다. 단정수립 이후 보수세력은 해방기 우파의 I 유형, 진보세력은 해방기 중간파의 V유형과 V-2유형을 계승해 왔지만, 각 시기별·정권별로 통일노선의 계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국내외정세 변화에 따라 각 통일노선의 희망성쇠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탈냉전 이후,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정치사회의 통일노선들이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점차 V유형에 근접하는 방향으로 수렴되는 추세를 보인다. 통일노선, 공식/비공식 통일방안, 실제 통일정책 상호 간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통일노선의 착시현상’도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 각 통일노선의 유용성과 한계는 지역적 양극체제의 ‘경화 정도’에 따라 커다란 편차를 보여준다. 한국 정치사회의 통일노선들의 수렴 추세는 고무적 현상이지만, V유형의 성공적·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고도의 지혜와 부단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 『국제관계연구』 제27권 제1호(2022년 여름호).

<http://dx.doi.org/10.18031/jip.2022.6.27.1.69>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 B5A07106339). 연구과제 선정 및 논문게재 과정에서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임명의 심사위원님들, 특히 “도전성은 크게 인정되지만 연구실현 가능성이 크게 우려된다”는 고언을 해주신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연구수행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한국정치학도의 사명감과 그분의 고언을 되새기면서 힘을 낼 수 있었다. 물론 본 연구의 결함은 고스란히 필자의 몫이다.

* 연세대학교 글로벌창의융합대학 국제관계학전공 강사

I. 서론

분단의 굴곡과 더불어 한국 정치사회의 통일노선들도 부침의 세월을 경험해 왔다. 각종 통일노선이 상당한 내적 변화를 경험해 왔을 뿐만 아니라 보수세력과 진보세력 간의 정권 교체에 따라 한국 정부의 통일노선이 널뛰듯이 뒤바뀌기도 했다. 그렇다면, 한국 정치사회에 등장한 통일노선들의 계보는 어떻게 규명될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한국 정치사회의 통일노선들이 언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정치세력에 의해, 어떻게 정립되고 지속/변화되었는가? 각 통일노선의 유용성과 한계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 통일노선은 통일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최상위 수준의 지침이다. 통일노선은 그 하위 수준의 통일방안, 통일전략, 대북·통일정책,¹⁾ 통일외교, 통일운동 등의 기본방향을 제시해줄 뿐만 아니라 통일문제를 둘러싼 각종 갈등과 협력을 파생시키는 근원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통일노선 연구는 각종 통일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금석이다. 둘째, 일반적으로 계보 연구는 혈통의 뿌리와 위상을 추적·규명함으로써 특정 혈통의 기본성격, 특징, 변화과정 등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가능케 한다. 통일노선의 계보 연구도 마찬가지이다. 통시적 관점에서 특정 통일노선의 계승과 변화의 배경·과정·결과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도 있다. 더욱이 명칭을 달리하는 통일방안, 통일전략, 대북·통일정책 등이 난무하여 이해의 혼란을 가중시켜 온 바, 이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서도 통일노선의 계보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통일노선, 공식/비공식 통일방안, 실제 통일정책 상호 간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통일노선의 착시현상’은 커다란 오해와 혼란을 야기한다. 따라서 이런 착시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작업도 필요하다. 넷째, 한국 정치사회에는 아직까지 합의된 통일노선조차 부재하다. 통일노선 갈등이 한국 정치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막대한 국력 낭비를 초래해 왔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따라서 21세기의 통일환경에 부합되고 한국 정치사회의 합의를 이끌 수 있는 통일노선의 발굴과 정립은 중대하고도 시급한 해결과제이다. 이런 면에

1) 통일노선은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이고, 통일정책은 대북정책뿐만 아니라 대주변국정책까지 망라하는 바 대북정책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다.

서 각종 통일노선의 유용성과 한계를 규명하고 평가하는 작업은 대단히 긴요하다. 마지막으로, 통일노선을 둘러싼 갈등과 협력은 한국정치외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어 왔다. 따라서 통일노선의 계보 연구는 한국정치외교사의 거시적 이해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통일노선의 계보 연구는 불모지나 다름없다. 대학·대학원에서 강의교재로 활용할 만한 연구조차 부재한 실정이다. 물론 한국 정치사회의 통일노선을 직/간접적으로 다룬 연구나 자료집은 상당히 많다.²⁾ 이들의 대부분은 특정 통일노선, 특정시기의 통일노선, 특정 정부나 정파의 통일노선 연구에 주력하거나 관련 자료들을 모아서 소개한다. 통시적 관점에서 통일논의, 통일정책, 통일운동 등의 변천사를 다룬 연구들도 있다.³⁾ 이런 선행연구들은 그 나름의 가치가 있고 본 연구수행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해방기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를 포괄하는 ‘통일노선의 계보’ 연구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다. 각 통일노선의 유용성과 한계에 대한 분석·평가도 미흡하다. 통일노선의 착시현상을 규명한 연구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해방기부터 현재까지 한국 정치사회에 등장한 각종 통일노선의 계보를 시론적·총론적·통시적 차원 및 지속과 변화의 관점에서 규명한다. 각 통일노선의 유용성과 한계도 분석·평가하고 선행연구들이

2) 홍석률, 『통일문제와 정치·사회적 갈등: 1953-1961』(서울: 서울대출판부, 2001); 엄상윤, 『제2공화국시대의 통일논쟁』(서울: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1); 김영명, 『한국의 정치변동』(서울: 을유문화사, 2006); 김근식, “노무현정부의 평화변영정책: 구상과 현실 그리고 과제,” 『통일문제연구』 제16권 제1호 (평화문제연구소, 2004), pp. 5-25; 박광득, “통일문제의 해결을 위한 보수·진보진영의 정책 노선에 대한 연구,” 『통일전략』 제17권 제1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17), pp. 9-38; 백학순, 『박근혜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역대 남한정부의 대북·통일정책과 비교』(성남: 세종연구소, 2018);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각계통일논의자료집』 I·II·III (서울: 국토통일원, 1988); 국토통일원, 『한국통일방안의 변천과정』(서울: 국토통일원, 1969); 노중선, 『민족과 통일 I (자료편)』(광주: 사계절, 1985); 노중선, 『연표 남북한 통일정과 통일운동 50년』(광주: 사계절, 1996).

3) 박순성·최진욱, 『통일논의의 변천과정』(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김영재, “남북한 정부의 통일정책 분석,”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2집 1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0), pp. 375-407; 신영석, 『역대정권의 통일정책 변천사 1948~2008』(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08); 심지연, 『남북한 통일방안의 전개와 수립』(파주: 돌베개, 2001); 양영식, 『통일정책론: 이승만정부로부터 김영삼정부까지』(서울: 박영사, 1997); 이정우, “한국 통일정책의 전개과정: 현실주의적 해석의 관점에서,” 『북한연구학회보』 제15권 제2호 (북한연구학회, 2011), pp. 239-264; 최봉운, 『민족통일운동사: 민중적 통일운동의 전개를 위하여』(서울: 한백사, 1988); 황지환, “진보 대 보수의 대북정책, 20년 이후,” 『통일정책연구』 제26권 제1호 (통일연구원, 2017), pp. 29-49.

간과한 통일노선의 착시현상도 고찰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의 통일노선 정립에 대한 시사점도 도출한다. 특히, 각 통일노선의 상대적 위상변화를 규명함으로써 “정치세력별 통일노선들의 간극이 여전히 극심하다”는 일반적 인식을 검증하는데 역점을 둔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국’ 정치사회의 통일노선이 분석대상인 바 단정수립 이후 북한의 통일노선은 분석하지 않는다. ‘통일노선’ 분석에 초점을 두는 바 각종 통일방안, 통일정책, 통일운동 등에 대한 심층 분석도 시도하지 않는다. 거시적 차원의 ‘계보’ 분석에 초점을 둘 뿐만 아니라 지면의 제약도 있는 바 각종 통일노선의 내용에 대한 심층 분석도 시도하지 않는다. 이런 점들에 대해 독자들의 너그러운 이해와 양해를 구한다.

본 연구는 역사구조적 접근법, 시계열 접근법, 환경/행위자 접근법, 국제체계적 접근 등의 연구방법을 동원한다. 역사구조적 접근법과 시계열 접근법은 장기간에 걸쳐 복잡하게 전개되는 통일노선 계보의 지속과 변화를 거시적 차원에서 고찰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환경/행위자 접근법과 국제체계적 접근법은 미시적 차원에서 통일환경과 통일노선 변화의 배경·과정·결과, 각종 통일노선의 유용성과 한계를 규명하는데 효과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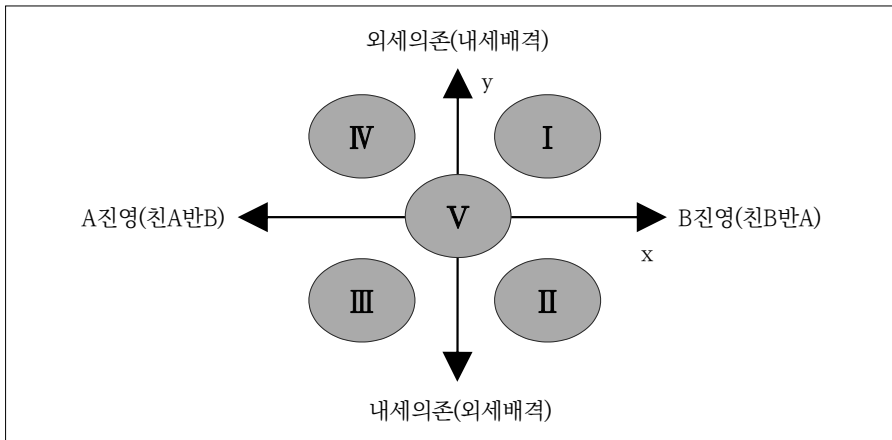
한국 정치사회에 등장한 통일노선들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바, 이런 통일노선들을 일일이 고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양각색의 통일노선들을 몇 개의 유형으로 단순화시키는 방식으로 분석틀을 설정하여 접근한다. 이런 분석틀은 각 통일노선의 계승과 변화를 설명하고 각 통일노선의 유용성과 한계를 보다 객관적·균형적으로 분석·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통일노선들의 유형화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한반도의 사례를 토대로 약소국의 분단/통일이 작동되는 원리를 규명한 필자의 연구를 원용한다.⁴⁾ 이 연구는 ‘자주성의 정도’와 ‘진영편중의 정도’라는 2개의 독립변수를 추출하여 ‘한반도의 지역적 양극체제’ 하에서 약소국의 분단과 통일이 작동되는 메커니즘을 설명한다.⁵⁾ ‘자주성의 정도’는 통일과정에서

4) 자세한 내용은 엄상윤, “한반도 통일의 이론적 모색: 지역적 양극체제와 약소국의 분단/통일,” 『국제관계연구』 제10권 제2호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05), pp. 5-32 참조.

5) 이 연구는 국제적 무정부상태 하에서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바 약소국외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기본가정에서 출발한다. 2개의 변수도 이런 기본가정 하에서 추출된 것이다. 국제사회의 무정부성과 약소국외교의 근본적 한계에 관해서는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5th ed.) (New York: KNOPE, 1973);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ssachusetts: Addison-Wesley Publishing Co., 1979); Annette B. Fox, *The Power of*

작용하는 내세적 역량과 외세적 역량의 상대적 비중, 즉 통일과정의 주도권 행사 주체를 의미한다. ‘진영편중의 정도’는 통일한국의 외교노선이 지역적 양극체제를 구성하는 양 진영 중 어느 한쪽 진영에 기울거나 밀착되는 상대적 비중, 즉 통일한국의 외교노선 지향방향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런 2개의 독립변수를 일련의 스펙트럼 선상에 놓고 조합하여 5개의 이념형(ideal types)을 도출한다. 해방 이후의 역사적 현실에 투영해 보면, <그림 1>에서 A진영은 냉전기의 소련진영과 탈냉전 이후의 중국진영, B진영은 냉전기 및 탈냉전 이후의 미국진영을 의미한다.⁶⁾

<그림 1> 한국 정치사회의 통일노선 이념형



출처: 엄상윤(2005), pp. 12-15의 내용에 의거하여 필자 작성.

I 유형은 통일과정에서 내세적 역량보다는 외세적 역량에 크게 의존하며, 통일한국의 외교노선을 B진영에 크게 편중시키는 통일노선이다. 따라서 B진영의 패권적 외세(미국)가 통일의 주도권을 행사하게 된다. II유형은 통일과정에서 외세적 역량보다는 내세적 역량에 크게 의존하며, 통일한국의 외교노선을 B진영에 크게 편중시키는 통일노선이다. 따라서 B진영을 선호·추종

Small States: Diplomacy in World War II (Chicago: Univ. of Chicago, 1950); Marshall Singer, *Weak States in a World of Powers: The Dynamics of International Relationships* (New York: The Free Press, 1972); Michael Handel, *Weak States in the International System* (London: Frank Cass, 1981) 등 참조.

6) 자세한 설명은 엄상윤 (2005), pp. 12-15, 20-22 참조.

하는 내세가 통일의 주도권을 행사하게 된다. III유형은 통일과정에서 외세적 역량보다는 내세적 역량에 크게 의존하며, 통일한국의 외교노선을 A진영에 크게 편중시키는 통일노선이다. 따라서 A진영을 선호·추종하는 내세가 통일의 주도권을 행사하게 된다. IV유형은 통일과정에서 내세적 역량보다는 외세적 역량에 크게 의존하며, 통일한국의 외교노선을 A진영에 크게 편중시키는 통일노선이다. 따라서 A진영의 패권적 외세(소련/중국)가 통일의 주도권을 행사하게 된다. V유형은 통일과정에서 내세적 역량과 외세적 역량의 대등한 절충 혹은 내세와 외세의 협력을 추구하며, 통일한국의 외교노선을 A진영과 B진영 중 어느 한쪽 진영에 과도하게 편중시키지 않는 중립적 통일노선이다.⁷⁾ 따라서 A진영과 B진영 모두에 우호적인 내세, A진영의 패권적 외세, B진영의 패권적 외세가 공동으로 통일의 주도권을 행사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런 5개의 이념형을 천차만별 통일노선들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본틀로 설정한다. 물론 I~V유형은 이념형이기 때문에 한국 정치사회에서 실존한 유형들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II장에서 설명한다. 한편, 자주성과 진영편중의 ‘정도’를 엄밀한 수치로 환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바, 이런 ‘정도’는 각 통일노선의 상대적·개략적 위상변화를 가늠하는 수준에서 고찰한다.

한국 정치세력의 분류와 관련하여, 해방기에는 좌파/중간파/우파로 구분하고 단정수립 이후에는 진보세력/보수세력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⁸⁾ 단정수립 이후 해방기의 좌파는 북한의 지배세력, 중간파는 한국의 진보세력, 우파는 한국의 보수세력으로 변모되었다. 한국 정치사회에서 ‘중도’를 표방하는 정치세력은 2010년대 중반부터 등장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한국의 정치세력을 해방기에는 좌파/중간파/우파, 단정수립 이후에는 진보세력/중도세력/보수세력으로 대별하여 접근한다. 지면 관계상, 주요 정치세력은 정부, 여당, 제1야당 정도로 한정한다.

본 연구는 집권경쟁력 확보, 외세의 지원 획득, 남남갈등 해소, 분단개선

7) 자세한 설명은 엄상윤 (2005), pp. 15-22 참조.

8) 한국의 보수/진보, 우파/좌파의 개념과 분류기준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강원택, “한국의 이념 갈등과 진보·보수의 경계,” 『한국정당학회보』 제4권 제2호 (한국정당학회, 2005), pp. 193-210; 김경미,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에 대한 이론적 좌표설정 모색,” 『정치정보연구』 제12권 1호 (한국정치정보학회, 2009), pp. 45-57 참조.

(분단저지) 등을 각 통일노선의 유용성과 한계를 분석·평가하는 기준으로 설정한다. 특히,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이 지역적 양극체제 하에서 작동되는 만큼, 본 연구는 지역적 양극체제의 ‘이완↔경화(loose↔tight) 정도’에 따라 각 통일노선 유형의 유용성과 한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규명하는데 역점을 둔다.⁹⁾

본 연구는 특정 정치세력의 통일노선 유형 자체의 교체를 통일노선 계보의 변화를 판별하는 핵심 기준으로 설정한다. 동일유형 내의 변화는 ‘자주성의 정도’나 ‘진영편중의 정도’에 있어서 중대한 수정 여부를 중요 판별기준으로 삼는다. ‘자주성의 정도’는 민족자주/외세배격 추구, 외세의 영향력과 개입 인정 등의 면에서, ‘진영편중의 정도’는 통일한국의 지향이념, 대외인식, 외교관계·외교정책의 갈등/협력 등의 면에서 고찰한다. 통일노선의 착시현상 여부도 이런 기준과 지표를 적용하여 규명한다.

본 연구는 ‘통일노선 계보의 중대 변화’ 여부를 시기구분의 기준으로 삼는다. 이런 변화는 지역적 양극체제의 속성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방기부터 현재까지를 4개의 시기, 즉 해방기, 냉전기(이승만~전두환), 탈냉전기(노태우~김영삼), 21세기(김대중~문재인)로 대별하여 접근한다. 각 시기 내에서는 정권별로 세분하여 접근한다. 단, 해방기는 지역적 양극체제의 속성 변화를 기준으로 시기를 세분한다.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된다. II장에서는 해방기의 임시정부수립 노선들을 분석하면서 한국 정치사회의 통일노선 원형을 도출한다. III~V장에서는 각각 냉전기, 탈냉전기, 21세기의 통일노선 계승·변화과정을 분석한다. VI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향후의 통일노선 정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9) 이완된 양극체제(loose bipolar system)와 경화된 양극체제(tight bipolar system)의 속성과 차이에 관해서는 Morton A. Kaplan, *System and Process in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57), pp. 36-4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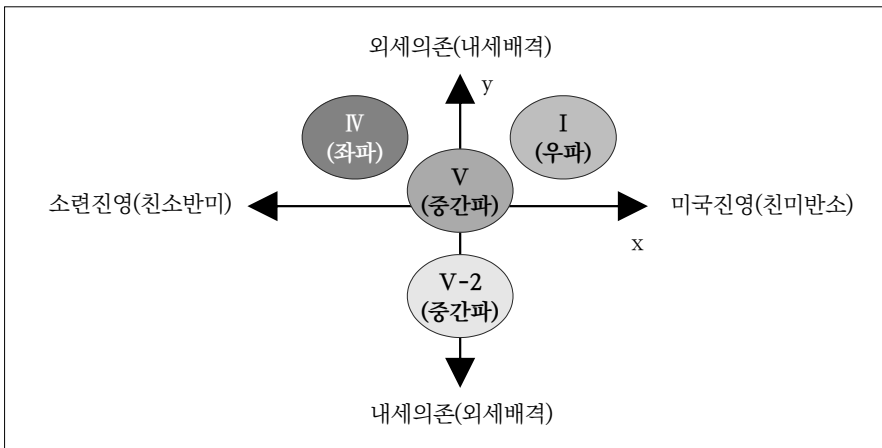
II. 해방기: 통일노선의 원형 정립

해방기는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지역적 양극체제가 형성·가동되면서 한국 정치사회에서 분단/통일문제가 처음으로 등장한 시기이다. 해방기는 단정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단정수립 이후와는 달리 임시정부수립 문제가 분단/통일의 화두가 되었다. 임시정부수립 문제는 단정수립 이후의 분단/통일문제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따라서 해방기의 분단/통일문제는 임시정부수립 문제로 대변된다.

독자들의 이해 제고를 위해 임시정부수립 노선의 유형들을 먼저 설명한 다음, 임시정부수립 노선들의 형성과 지속/변화, 유용성과 한계 등을 고찰한다.

1945년 12월 말 미·소의 한반도 신탁통치안이 알려지면서 한국 정치사회에서는 임시정부수립 문제가 초미의 이슈로 부각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치세력들은 임시정부수립 문제를 둘러싼 각종 노선을 표출하게 되었다. 당시 한국의 정치세력은 좌파, 중간파, 우파라는 3개의 정파로 분화되었고, 임시정부수립 노선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개의 유형으로 형성·정립되었다.¹⁰⁾

<그림 2> 해방기 한국 정치세력들의 임시정부수립노선 유형



10) 해방기 한국 정치세력들의 임시정부수립 노선 유형은 한국 정치사회에서 장기간 대규모로 실존한 한국 정치세력들의 통일노선 유형과 별 차이가 없다. 엄상운 (2005), p. 21 참조.

이런 4개의 실존유형은 I 장의 분석틀에서 제시한 5개의 통일노선 이념형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즉, 이념형에서 도출된 II유형과 III유형은 등장하지 않았고, V유형의 변형인 V-2유형이 등장했다는 것이다.¹¹⁾ V-2유형은 외세적 역량보다는 내세적 역량에 크게 의존하며, 통일한국의 외교노선을 A진영과 B진영 중 어느 한쪽 진영에 과도하게 편중시키지 않는 중립적 통일노선이다.¹²⁾ 따라서 A진영과 B진영 모두에 배타적인 외세배격적 민족자주노선을 추구하는 내세가 통일의 주도권을 행사하게 된다. V유형과 V-2유형은 통일한국의 중립적 외교노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통일과정에서 외세의 영향력과 역할에 대한 인정/배격 정도가 상이하다.

여하튼, 해방기의 우파는 I 유형, 좌파는 IV유형, 중간파는 V유형과 V-2유형에 입각한 임시정부수립 노선을 제시했다. 우파/좌파와는 달리 중간파는 2개의 유형을 제시한 것이다.¹³⁾ 우파의 I 유형은 ‘친미·반소 외세의존형’, 좌파의 IV유형은 ‘친소·반미 외세의존형’, 중간파의 V유형은 ‘친미·친소 내외세절충형’, 중간파의 V-2유형은 ‘비미·비소 민족자주형’에 해당된다. 각 노선의 유형별 속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1>에서 보듯이 다방면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특히, 대일 인식을 제외하면 대외인식과 외교노선 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전략적 우선순위 면에서도 우파와 좌파가 이념적 승리를 절대시하여 단정수립도 불사한 반면, 중간파는 단정수립 반대를 절대시하여 임시정부수립을 우선했다.

11) y축의 상단에 위치하는 V유형은 V-1유형, y축의 하단에 위치하는 V유형은 V-2유형을 의미한다. 엄상윤 (2005), p. 20.

12) 엄상윤 (2005), pp. 21-22.

13) 해방기 중간파의 임시정부수립 노선과 활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윤민재, 『중도파의 민족주의운동과 분단국가』 (서울: 서울대 출판부, 2004), pp. 142-516 참조.

<표 1> 해방기 임시정부수립 노선의 유형별 성향

성향 \ 유형	친미·반소 외세의존형 (Ⅰ 유형: 우파)	친소·반미 외세의존형 (Ⅳ 유형: 좌파)	친미·친소 내외세절충형 (Ⅴ 유형: 중간파)	비미·비소 민족자주형 (Ⅴ-2 유형: 중간파)
지향 이념	자유주의	사회주의	민족주의(사회민주주의)	
외세의 영향력 인정	적극 인정(외세의존)	적극 인정(외세의존)	소극 인정	적극 배제
대미 인식	절대 우호	절대 적대	우호	불신
대소 인식	절대 적대	절대 우호	우호	불신
대중 인식	자유세력 우호 / 공산세력 적대	공산세력 우호 / 자유세력 적대	우호	불신
대일 인식	절대 적대			
상대 정치세력 인정	불신 (좌파 소멸 추구)	불신 (우파 소멸 추구)	인정 (공존 추구)	불신 (외세의존세력 적대)
외교노선	친미·반소·반일 (친자유·반사회)	친소·반미·반일 (친사회·반자유)	친미·친소·반일 (중립/등거리)	비미·비소·반일 (중립/등거리)
경제체제	시장경제	계획경제	민족경제(시장경제와 계획경제 절충)	
전략적 우선순위	이념적 승리(단정수립 불사)		임시정부 수립(단정수립 결사 반대)	
주요 인물	이승만, 김성수, 김준연, 송진우, 임영신, 이시영 등	박헌영, 김일성, 이강국, 김두봉, 백남운 등	여운형, 김구식, 김구, 허헌, 김오성, 배성룡, 엄항섭 등	
주요 정치세력	국민당, 한민당,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소련공산파, 장안파, 인민당, 민주주의민족전선	한독당, 민혁당, 근민당, 민족자주연맹	

출처: 엄상운, “제1장 한국인의 대외인식: 지속과 변화,” 이기완 외, 『국제사회의 대외인식과 한국관』
(서울: 매봉, 2009), p. 37 일부 내용 필자 수정.

임시정부수립 노선들의 형성과 지속/변화, 유용성과 한계는 지역적 양극 체제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 지역적 양극체제의 변화를 기준으로 할 때, 해방기는 3개의 시기로 세분될 수 있다. 즉, 이완기→전환기→경화기라는 3단계의 변화과정을 거쳤다는 것이다.¹⁴⁾

이완기는 1945년 8월 해방부터 1946년 5월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14) 이호재 외, 『한국적 국제정치이론의 모색: 해방기 정치지도자들의 대외인식과 외교노선 사례를 중심으로(1945-1948)』 (서울: 화평사, 2005), pp. 70-73. 여기서 이완기는 외세의 영향력이 부재하여 ‘완전히’ 이완된 상태가 아니라 외세의 영향력이 중화(中和)되어 ‘상당히’ 이완된 상태를 의미한다.

결렬될 때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아직 국제적 냉전과 미·소의 대립이 격화되지 않은 시기이다. 미·소는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를 통해 잠정 5년의 한반도 신탁통치안에 합의하고 한국의 정치세력들로 구성되는 임시정부수립을 모색했다. 신탁통치안은 즉각적 자주독립이 아니라 신탁통치의 범위 내에서 미·소가 한국 정치세력들에게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내치의 자율성을 발휘할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¹⁵⁾ 이처럼 한반도에서 미·소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했지만, 미·소의 영향력은 미·소 간의 타협의 산물인 신탁통치안의 형태로 중화되어 작용하고 있었다. 이는 한반도의 지역적 양극체제가 상당히 이완된 상태로 가동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환경과 크게 부합되는 노선은 친미·친소의 기본입장에서 내세와 외세의 협력을 적극 추구하는 V유형이다. 그런데 한국 정치사회에서는 V-2유형이 압도적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정국을 주도하고 있었다. 당시 가장 중요한 정치지도자인 김구를 위시한 중간파는 V-2유형에 입각한 즉각적 자주독립을 요구하면서 대대적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전개했던 것이다. 이런 행태는 신탁통치안이라는 ‘패권적 외세들(미·소)의 허용범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V-2유형은 외세의 지원 획득, 집권경쟁력 확보, 임시정부수립 실현 등의 면에서 커다란 한계를 노정시키게 되었다. 한편, I 유형의 우파는 노선도 부적합하고 지배력도 약했기 때문에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신탁통치 수용으로 돌변한 IV유형의 좌파 역시 노선도 부적합하고 중앙정치 무대에서는 지배력도 약했기 때문에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했다. 결국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는 임시정부수립 문제를 논의할 협의대상자 선정문제로 난항을 거듭한 끝에 1946년 5월 무기 휴회에 돌입하게 되었다.

전환기는 1946년 5월부터 1947년 9월 한반도문제의 유엔 이관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트루먼 독트린(Truman Doctrine), 마셜 플랜(Marshall Plan), 중국의 국공내전 본격화 등이 말해주듯이 유럽과 아시아에서 국제적 냉전이 점차 고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미·소 간의 불신과 갈등도 점차 증폭됨으로써 한반도의 지역적 양극체제도 점차 경화되기 시작했다. 미·소의 통제력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한국 정치세력들의 상대적 자율성도 이완기에

15) 이호재 외 (2005), pp. 80-203 참조.

비해 약화되었다. 그러나 신탁통치안이 여전히 살아 있었고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도 개최되었기 때문에 지역적 양극체제가 크게 경화된 것은 아니었다. 요컨대, 이 시기는 이완기에서 경화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해당된다.¹⁶⁾ 이런 환경에서는 어느 유형의 노선도 절대적 부합성을 가질 수 없지만, 신탁통치안에 부응하는 V유형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한국 정치사회에는 3개의 유형, 즉 이승만이 주도한 우파의 I 유형, 박헌영이 주도한 좌파의 IV 유형, 김규식·여운형이 주도한 중간파의 V 유형이 동시에 부각되었고, 이런 3개의 유형이 엇비슷한 세력을 행사하면서 각축전을 벌이게 되었다. 이 시기에 중간파는 V-2 유형에서 V 유형으로 노선을 전환했고, 1946년 6월부터 미군정의 지원 하에 좌우합작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좌우합작운동은 우파와 좌파의 비협조, 중간파의 지도력 부족 등으로 인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결국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도 협의대상자 선정문제로 난항을 겪다가 1947년 9월 미국의 한반도문제 유엔이관 결정과 더불어 결렬로 종결되었다. 따라서 V유형을 통해 임시정부수립이 실현될 수 있었던 ‘일말의 기회’도 상실되었다.

경화기는 1947년 9월부터 1948년 8월 단정수립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국제적 냉전이 격화된 상태였다. 미·소 간의 불신과 갈등 고조, 중국 공산화의 여파, 미·소 공동위원회의 실패 등으로 지역적 양극체제도 크게 경화되고 있었다. 신탁통치안이 사문화됨으로써 임시정부수립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미·소의 통제력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한국 정치세력들의 상대적 자율성도 더욱 약화되었다. 요컨대, 이 시기는 단정수립이 기정사실화 혹은 예정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¹⁷⁾ 이런 환경에서 미국의 지원 획득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노선은 I 유형이고 소련의 지원 획득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노선은 IV 유형이다. V 유형과 V-2 유형은 미·소 모두로부터 버림받는 배제대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38선 이남에서는 이승만이 주도한 우파의 I 유형, 38선 이북에서는 김일성이 주도한 좌파의 IV 유형이 압도적 지배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한편, 김구 주도의 중간파는 V 유형에서 V-2 유형으로 재전환·복귀하여 민족공조와 남북협상을 주장하면서 분단을 막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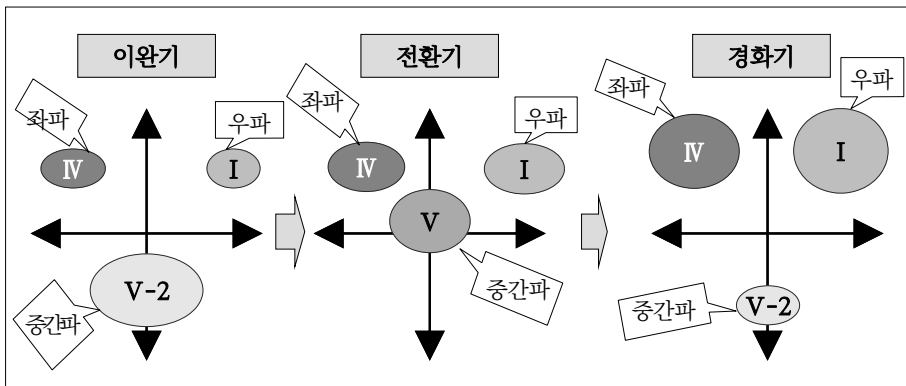
16) 이호재 외 (2005), pp. 204-249 참조.

17) 이호재 외 (2005), pp. 250-339 참조.

보려는 노력을 전개했다. 그러나 V-2유형의 한계가 분명한 만큼 이들의 노력도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결국 임시정부수립 문제를 둘러싼 한국 정치세력들의 노선 경쟁은 I 유형과 IV유형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완기, 전환기, 경화기에 등장한 임시정부수립 노선의 유형과 지배력 변화를 간단히 표현해보면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각 유형의 크기는 한국 정치사회에 대한 상대적 지배력을 의미한다.

<그림 3> 해방기 임시정부수립 노선의 유형과 지배력 변화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방기는 미·소의 영향력이 압도적인 환경에서 한국 정치사회에는 3개의 정파에 의해, 4개 유형의 임시정부수립 노선이 등장했다. 우파는 I 유형, 좌파는 IV유형, 중간파는 V유형과 V-2유형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중간파는 외세의 지원과 협력을 기대할 때는 V유형, 그렇지 않을 때는 V-2유형을 구사하는 경향도 보여주었다. 이런 4개의 유형이 지역적 양극체제의 이완기, 전환기, 경화기를 거치면서 각각 유용성과 한계를 달리하는 양상도 여실히 보여주었다. 결국 지역적 양극체제의 경화 정도와 크게 부합된 경화기의 I 유형과 IV유형이 각각 현실정치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남북한의 단정수립과 분단이었다. 여하튼, 이런 4개 유형의 임시정부수립 노선이 통일노선의 원형으로 형성·정립되었고, 통일노선 계보의 원조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단정수립과 더불어 IV유형은 북한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한국 정치사회에는 I·V·V-2유형만 남게 되었다.

Ⅲ. 냉전기: 통일노선의 구체화와 흥망성쇠

냉전기는 냉전적 양극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한반도의 지역적 양극체제도 크게 경화된 시기이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 정치사회는 단정수립과 동시에 ‘통일’이라는 중대하고도 새로운 해결과제를 부여받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 정치사회는 냉전 대비 및 통일문제 해결을 위해 적절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해방기의 임시정부수립 노선들을 분단 상황에 걸맞은 통일노선으로 계승·변화시키고 실천적 차원의 통일방안·통일전략·통일정책을 강구할 필요도 있었다.

이승만시대는 ‘북진통일’이 한국 정치사회를 압도한 시기이다. 보수세력의 이승만정권은 ‘유엔감시 하의 북한만 총선거’를 공식 통일방안으로 표방했다. 그러나 실제 대북·통일정책은 6.25전쟁 중에는 북진통일이었고, 여타 시기는 현상유지였다고 볼 수 있다.¹⁸⁾ 여하튼, 이승만정권과 자유당의 실제적 통일방안은 북진통일론이었다. 북진통일론은 미국의 군사지원을 받아 무력으로 북한에 진격하여 공산세력을 소멸시키고 일방적·전면적 흡수통일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북진통일론은 해방기 우파의 I 유형이 새롭게 형성된 분단 상황에 투영된 통일노선이며, 무력적 수단만 추가되었을 뿐 기본내용은 해방기의 I 유형과 별 차이가 없다. 공식 통일방안과 실제적 통일방안은 수단을 달리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공식 통일방안도 ‘평화적’ 북진통일론에 불과한 바 I 유형에 속한다. 이승만이 해방기 I 유형의 주창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니다. 한편, 보수세력의 야당인 민주당은 ‘유엔감시 하의 남북한 총선거’를 표방했고 ‘화전양양론(和戰兩樣論)’을 주장하기도 했다. ‘유엔감시 하의 남북한 총선거’는 미국이 제시한 통일방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며, 화전양양론은 이승만정권의 북진통일론과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을 절충시킨 것이다. 이런 민주당의 통일방안도 해방기의 I 유형을 계승한 것이며 평화적 수단을 상대적으로 강조한 점 이외에는 이승만정권

18) 이승만정권의 북진통일론이 북한의 위협을 저지하기 위한 공갈정책 혹은 한국 정부의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했다는 평가도 있다. 이호재, 『한국외교정책의 이상과 현실』(서울: 법문사, 2000), pp. 337-347; 박순성 외 (1993), p. 33; 최장집, “한국전쟁에 대한 하나의 이해,” 최장집 편, 『한국전쟁연구: 한국현대사의 이해 I』(서울: 태암, 1990), pp. 330-331. 그러나 6.25 전쟁 중에는 북진통일론이 실제 통일정책으로 실천되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의 북진통일론과도 별반 차이가 없다. 진보세력의 야당인 진보당은 이승만정권의 북진통일을 거부하면서 평화통일을 주장했고 지향이념으로 사회민주주의를 제시했다. 진보당의 통일방안은 해방기의 중간파 노선을 계승한 것이지만, V유형과 V-2유형 중 어느 유형인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자주성의 정도’ 면에서 내세와 외세의 협력을 강조한 바 V유형에 상대적 방점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⁹⁾ 여하튼, 이승만정권의 통일논의 독점과 정적 탄압으로 민주당과 진보당의 통일방안은 한국 정치사회에서 별다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민주당과 진보당도 통일문제 해결보다 반독재·민주화 투쟁을 우선하고 있었다.

장면시대는²⁰⁾ 4.19혁명과 민주화, 진보당 사건으로 정치적 동면상태 있던 진보세력의 전면 재등장과²¹⁾ 더불어 각종 통일방안이 봇물처럼 쏟아진 시기이다. 따라서 장면시대에 등장한 통일방안들을 간단히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큰 틀에서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²²⁾ 4.19혁명과 이승만정권의 붕괴 직후 무력통일론은 한국 정부의 통일방안에서 공식 폐기된 바,²³⁾ 평화통일론이 구체화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보수세력의 장면정권과 민주당은 I유형에 속하는 ‘유엔감시 하의 남북총선거’를 공식 통일방안으로 표방했지만, 실제 대북·통일정책은 현상유지를 의미하는 ‘선건설 후통일론’이었다. 한국의 극심한 정국 혼란과 북한의 적극적 평화통일공세에 직면하여 장면정권은 수세적 입장에서 현상유지를 선호했던 것이다. 보수세력의 야당인 신민당의 소장파는 당내 주도권 경쟁, 북한의 평화통일공세, 진보세력의 남북교류협상 주장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I유형에 속하는 ‘제한적 남북교류론’을 주장했다. 한편, 진보세력이 제시한 통일방안은 중립화통일론과 민족 자주통일론으로 대별된다. 중립화통일론은 재외교포 김삼규, 김용중 등이 논리를 제공하고²⁴⁾ 혁신동지총연맹, 사회대중당, 사회당, 중립화조국통일운동

19) 통일방안과 관련하여 진보당의 강령초안에는 “민주우방과 제휴하여 민주세력이 결정적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조국통일의 실현”으로 명시되어 있다.

20) 본 연구에서 장면시대는 4.19혁명에서 5.16군부쿠데타에 이르는 기간을 통칭한다.

21) 진보세력은 이승만정권의 탄압으로 1958년 ‘진보당 사건’ 이후 정치무대에서 사라졌다.

22) 장면시대의 통일방안과 통일논쟁에 대한 자세한 분석·평가는 엄상윤 (2001) 참조.

23) 허정 과도내각은 미국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한국 정부 차원에서 북진통일론을 공식 폐기했다. 엄상윤 (2001), pp. 23-26.

총연맹 등이 선호한 것이며, 통일한국의 중립화를 통해 통일을 실현시키자는 것으로 해방기 중간파의 V유형을 계승·변화시킨 것이다. 당시의 지배적 중립화통일론은 미국이 한반도의 중립화통일을 주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외세의존적 성격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틀에서 보면, 해방기의 V유형이 y축의 위쪽으로 상당히 이동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민족자주통일론은 이종률, 김영춘 등이 논리를 제공하고, 사회대중당, 혁신당, 사회당, 민족자주통일협의회, 대학생들의 민족통일연맹 등이 선호한 것이며, 외세 배격 및 자주적 남북교류·남북협상을 통해 통일을 실현시키자는 것으로 해방기 중간파의 V-2유형을 거의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미국의 협력과 지원을 기대했던 1960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중립화통일운동, 미국의 협력과 지원에 대한 기대가 무산된 1961년 1월부터 5월까지의 민족자주통일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기도 했다. 이처럼 이승만시대의 진보당에서는 모호하게 혼재되었던 V유형과 V-2유형이 장면시대의 진보세력에서는 명확히 구분·분화되었다. 진보세력은 해방기의 중간파가 그랬듯이 외세의 협력과 지원을 기대할 때는 V유형, 그렇지 않을 때는 V-2유형을 구사하는 행태도 보여주었다.

박정희시대는 정부의 통일논의 독점과 민간차원의 통일논의 억압으로 점철된 시기이다. 보수세력의 박정희정권과 공화당은 I 유형에 속하는 ‘유엔감시 하의 남북 자유선거’를 공식 통일방안으로 표방하고 반공통일·승공통일·멸공통일을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대북·통일정책은 장면정권처럼 현상유지에 방점을 둔 ‘선건설 후통일론’이었다.²⁵⁾ 대체로 1970년대 중반까지는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고 남북한 체제경쟁에서 앞서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정권은 통일문제 해결을 뒤로 미루고 경제발전과 체제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따지고 보면, 1970년대 초반의 남북 적십자회담, ‘7.4 공동성명’과 통일의 3대원칙 합의, ‘6.23 외교선언’ 등을 통한 일시적 남북관계 개선도 현상유지의 기초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한편, 장면시

24) 김삼규의 중립화통일론은 외세의존적 성격이 강한 바 V-1유형에 속하고, 김용중의 중립화통일론은 전형적 V유형에 속한다. 김삼규와 김용중의 중립화통일론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엄상윤, “제2공화국시대의 중립화통일론과 21세기의 한반도통일: 맨스필드·김삼규·김용중의 논리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3집 2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3), pp. 97-117 참조.

25) 박정희정권의 통일방안통일정책에 관해서는 심지연 (2001), pp. 52-76 참조.

대에 통일논쟁과 통일운동을 주도했던 진보세력은 5.16 군부쿠데타 직후 박정희정권의 강력한 탄압으로 또 다시 정치적 동면상태에 돌입하게 되었다. 한국 정치사회에서 중립화통일과 민족자주통일을 부르짖는 목소리도 5.16 군부쿠데타와 함께 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박정희시대에는 V유형과 V-2유형이 합법적 정치사회에서는 거의 종적을 감추게 되었다.²⁶⁾ 일부 진보세력은 통일문제 해결보다 반독재·민주화를 당면과제로 설정하고 민주화 투쟁에 진력했다.²⁷⁾ 민주화 투쟁의 주도세력은 장면시대의 V-2유형을 계승한 세력이다.

전두환시대 역시 정부의 통일논의 독점과 민간차원의 통일논의 억압으로 점철된 시기이다. 보수세력의 전두환정권과 민주정의당은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공식 통일방안으로 제시했다.²⁸⁾ 이 방안은 한국 정부가 구상한 최초의 공식적·구체적 통일방안이며, 남북한의 국력이 역전되어 남한이 체제경쟁에서 승리했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이다. 이 방안은 박정희시대의 I유형을 계승·변화시킨 것이며, 현상유지의 기조 하에 남북 화해협력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둔 것이다. 한편, 진보세력은 박정희시대와 마찬가지로 통일문제 해결보다 반독재·민주화를 당면과제로 설정하고 대대적 민주화 투쟁을 전개했다. 이 시기에도 민주화 투쟁의 주도세력은 V-2유형을 계승한 세력이다. 특히,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전대협)로 대표되는 대학생 조직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 여하튼, 전두환정권의 통일논의 억압과 진보세력의 민주화 투쟁 우선에 따라 한국의 정치사회 수준에서는 주목할 만한 진보세력의 통일방안이나 통일운동이 개진되지 않았다.

이처럼 냉전기는 I·V·V-2유형의 통일노선이 각종 통일방안·통일정책·통일운동으로 구체화되고 각 통일노선의 흥망성쇠가 뚜렷하게 나타난 시기이다. 특히, 진보세력이 선호한 V유형과 V-2유형은 장면시대에 화려하게 등장했다가 이내 사라지는 운명을 경험하게 되었다. 전두환시대부터 보수세력의 통일노선이 한국의 국력신장과 남북한 체제경쟁 우위에 비례하여 '자주

26) 1971년 대통령선거 당시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는 '3단계 통일론'을 제시한 바 있다. 박순성 외 (1993), pp. 107-108. 이 통일론은 추후 김대중정권의 햇볕정책으로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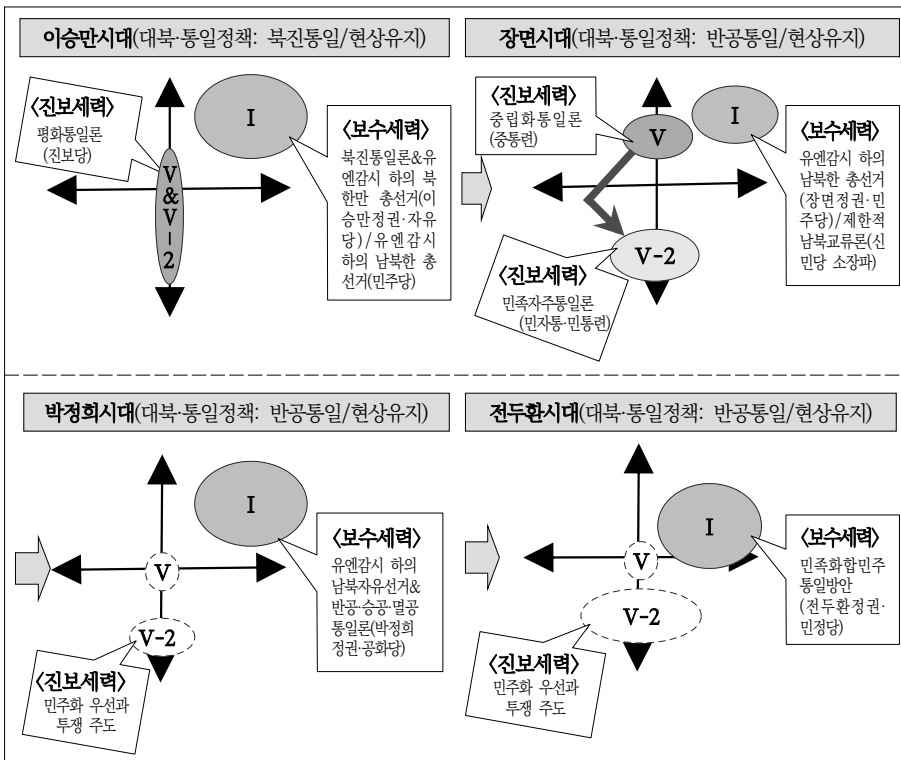
27) 민청학련사건, 유신반대 투쟁 등이 민주화 투쟁의 대표적 사례이다.

28)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내용에 관해서는 박순성 외 (1993), pp. 103-104 참조.

성의 정도' 면에서 내세의존 및 한국 주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즉, 본 연구의 분석틀에서 I 유형의 통일노선이 y축의 아래쪽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6.25전쟁 당시를 제외하면 보수정권들의 실제 통일방안은 공식 통일방안과는 달리 현상유지에 방점이 찍혀 있었는데, 이는 냉전기의 거의 전반에 걸쳐 통일노선의 착시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상에서 고찰한 냉전기의 통일노선 계승·변화 양상을 간단히 표현해보면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점선으로 표시된 유형은 한국 정치사회 수준에서는 뚜렷하게 표출되지 않았거나 종적이 사라진 것을 의미한다.

<그림 4> 냉전기의 통일노선 계승·변화 양상



1970년대 초반을 제외하면 냉전기는 지역적 양극체제가 크게 경화된 시기이다. 이런 환경에서 외세의 지원 획득과 집권경쟁력 확보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노선은 I 유형이며, 실제로 I 유형을 추구한 보수세력이 시종일관 집권하면서 한국 정치사회를 지배했다. 또한, 지역적 양극체제가 크게 경화된 만큼 어떤 유형의 통일노선도 통일을 실현시키기는 어려웠다. 6.25전쟁 중에 IV유형에 입각한 김일성정권의 무력적화통일론과 I 유형에 입각한 이승만정권의 북진통일론이 통일정책으로 적극 실천되었지만, 결국 양 진영의 외세들이 개입하는 지역적 양극체제의 작동으로 인해 통일 실현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1970년대 초반에는 닉슨독트린(Nixon Doctrine), 미·중 화해, 일·중 화해 등으로 지역적 양극체제가 상당히 이완되었기 때문에 V유형이 부합성을 크게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남북한은 각각 I 유형과 IV유형에 입각한 통일정책, 사실상 현상유지와 체제경쟁을 우선했기 때문에 일시적·제한적 분단개선의 성과를 거두는데 그치고 말았다.

IV. 탈냉전기: 통일노선의 실천성 강화

탈냉전기는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더불어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가 야기된 시기이다. 세계적 차원에서는 미·소 중심의 냉전적 양극체제가 해체되고 미국 단일패권체제가 개막되었다. 이런 탈냉전적 국제정세의 지각변동과 1990년 독일통일은 한반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북한은 체제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한국은 우월한 국력을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크게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북핵문제가 분단개선 및 통일문제 해결의 커다란 걸림돌로 부상하게 되었다. 한편, 한국은 1987년의 '6.29선언'에서 보듯이 민주화 투쟁이 성공하여 진보세력이 합법적 정치무대의 전면에 재등장하게 되었다. 이런 국내외정세의 급변은 한국 정치사회의 통일노선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노태우시대는 사회주의권의 대변혁과 독일통일을 목도하는 상황에서 통일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된 시기이다. 보수세력의 노태우정권과 민주자유당은 1988년부터 기존의 남방외교 일변도에서 탈피하는 북방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북방정책은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경유하여 평양으로 가겠다는 것이며, 북한체제의 붕괴와 변화를 유도하여 한국 주도의 독일식 흡수통일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노태우정권은 1989년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보강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²⁹⁾ 이 통일방안도 남북연합의 과도기를 거쳐 한국 주도의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것이다. 여하튼, 노태우정권의 실제 대북·통일정책은 북방정책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이처럼 노태우정권의 통일노선도 이전 보수세력들의 I유형을 계승·변화시킨 것이다. 그러나 노태우정권의 대북·통일정책은 I 유형의 통일을 가능한 현실로 상정하고 실천성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전 보수정권들의 대북·통일정책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한편, 진보세력은 민주화 투쟁의 성공 이후 통일문제 해결을 당면과제로 설정하면서 통일운동을 적극 추진했다. 전대협과 재야세력은 통일운동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들의 통일노선은 1989년 황석영, 문익환, 임수경 등의 방북이 말해주듯이 V-2유형의 민족자주통일론에 입각한 것이다. 그러나 진보세력의 통일운동은 1990년 독일통일의 실현 및 남북관계의 전격적·전면적 개선과 더불어 크게 약화되었다. 남북한 양정권, 특히 한국 정부의 주도 하에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었던 만큼 민족자주통일운동의 명분과 필요성도 약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김영삼시대에도 북한체제의 위기와 독일통일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핵문제가 한반도의 핵심 현안으로 부각되고, 1993년부터 미국이 적극 개입하면서 북핵문제의 주도권이 남북한에서 북·미로 넘어가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북핵문제 및 한반도문제 해결에 있어서 제3자로 전략하게 되었고 남북관계 개선의 동력도 크게 약화되었다. 북핵문제가 1994년 10월의 ‘북·미 제네바합의’로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영변 폭격설’과 ‘서울 불바다’가 말해주듯이 1993~94년에는 북핵문제로 인해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기도 했다. 이런 환경에서 보수세력의 김영삼정권과 신한국당은 1994년 노태우정권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보다 구체화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이 통일방안은 보수정권과 진보정권 여하를 막론하고 현재까지 한국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김영삼정권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연장선에서 ‘3단계 3기조 통일정책’도 제시했다.³⁰⁾ 그러나 김영

29)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자주, 평화, 민주를 통일의 3대 원칙으로 제시하고, ‘남북연합’을 통일의 과도단계로 설정하는 점진적·단계적 통일방안이다. 박순성 외 (1993), pp. 133-135.

30) 3단계는 화해협력, 남북연합, 1국가 통일을, 3원칙은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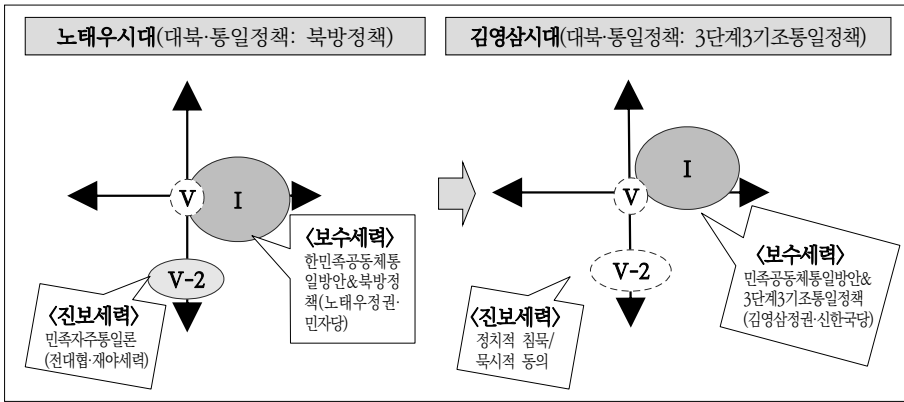
삼정권의 실제 대북·통일정책은 I 유형의 통일노선에 입각한 북한체제의 붕괴와 독일식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것이다. 김영삼정권은 민주정권이라는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이전 보수정권들의 통일노선을 계승했던 것이다.³¹⁾ 한편, 진보세력 일각에서는 V-2유형에 입각한 통일문제 해결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사회 수준에서는 김영삼정권의 대북·통일정책에 도전하는 진보세력의 집단적 움직임은 뚜렷하게 표출되지 않았다. 여기에는 북핵 문제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고조, 북한체제의 위기 심화와 독일식 흡수통일 기대,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북한의 책임, 김영삼정권의 남북정상회담과 제한적 남북교류협력 추진, 김영삼정권과 민주화투쟁 경험 공유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북한이 한국을 북핵문제 해결의 당사자에서 배제시키는 통미봉남(通美封南)정책을 적극 구사하고 핵전쟁 위협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던 상황에서 진보세력도 V-2유형에 입각한 통일문제 해결을 적극 촉구하고 나설 분위기가 아니었다.

이처럼 탈냉전기는 독일식 통일실현에 대한 한국 정치사회의 기대가 고조되고 I 유형이 압도한 상태에서 I 유형의 통일방안·통일정책, V-2유형의 통일운동이 적극 이행됨으로써 통일노선의 실천성이 크게 강화된 시기이다. 보수세력의 I 유형이 ‘자주성의 정도’ 면에서는 내세적 역량과 한국 주도의 상대적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한소·한중 수교를 통해 ‘진영편중의 정도’ 면에서도 미국 일변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본 연구의 분석틀에서 보면, 냉전기의 I 유형이 x축의 왼쪽과 y축의 아래쪽으로 상당히 이동하는 양상을 보였다. 단, 김영삼시대는 북핵문제로 인해 한반도문제의 주도권이 남북한에서 북·미로 전환됨으로써 노태우시대에 비해 한국 주도의 비중이 줄어들었다. 보수정권들이 독일식 흡수통일을 새로운 통일모델로 상정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들이 표방한 공식 통일방안이 I 유형의 통일노선 및 독일식 흡수통일 추진과 어긋나는 착시현상도 노정되었다. 진보세력은 1980년대 말에는 V-2유형을 계승한 민족자주통일운동을 실천적 차원에서 적극 전개했지만, 그 이후에는 한국의 정치사회 수준에서 주목할 만한 움직

31) 김영삼은 1960년 여당인 민주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고 당선되어 정계에 입문했고, 민주당에서 분파된 신민당으로 소속을 옮긴 후 I 유형에 속하는 ‘제한적 남북교류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통일문제에 대한 김영삼의 보수적 인식은 뿌리가 깊은 것이다.

임을 보이지 않았다. V유형은 민주화 이후의 탈냉전기에도 한국의 정치세력들로부터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상에서 고찰한 탈냉전기의 통일노선 계승·변화 양상을 간단히 표현해보면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각 유형의 중첩 부분은 일부 정책의 유사성을 의미하는 바, 중심축의 이동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림 5> 탈냉전기의 통일노선 계승·변화 양상



탈냉전기는 세계적 차원에서는 미국 단일패권체제가 지배한 시기이다. 그러나 한반도 차원에서는 미·중 중심의 지역적 양극체제가 상당히 이완된 형태로 지속되었다. 다시 말해, 소련을 대신한 중국이 A진영의 패권국 및 북한의 후견국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적 양극체제가 미·소 중심에서 미·중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미·중 간에는 갈등과 대립이 심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역적 양극체제의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의 국력 차이는 컸지만 중국이 견제한 상태에서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비토능력(veto power)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³²⁾

대체로 탈냉전기의 통일환경과 크게 부합되는 통일노선은 V유형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한반도에 미치는 미국의 영향력이 중국의 영향력에 비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V유형 내의 우측 하단에 위치하는 통일노선이 외세의 지

32) 국제체계 분석에서 하나의 극성(polarity) 혹은 하나의 진영 패권국으로 인정/불인정하는 핵심 기준은 패권국들 간의 국력 차이가 아니라 상대진영의 패권국에 대한 '비토능력 혹은 비토권의 보유'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원 획득, 집권경쟁력 확보, 분단개선과 통일실현의 가능성 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한국 정치사회에는 V유형을 온전히 추구하는 정치세력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국제적 냉전체제의 해체, 독일식 흡수통일에 대한 한국민들의 높은 기대, 북핵문제의 부각 등은 보수세력의 집권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했다. 게다가 보수세력은 I 유형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도 V유형의 속성을 상당히 수용하는 면모를 보여주었다. 즉, 보수세력이 통일노선 면에서는 상당한 ‘좌클릭’을 했다는 것이다. 탈냉전기의 보수세력 집권은 이런 맥락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 한러관계 개선, 한중관계 개선, 일시적 분단개선 등의 성과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V. 21세기: 통일노선의 유형 변화와 수렴 추세

21세기에도 미·중 중심의 지역적 양극체제는 상당히 이완된 상태로 지속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급속한 부상과 미국의 중국 견제가 본격화된 2010년 이후부터 미·중 패권경쟁이 점차 심화됨에 따라 지역적 양극체제도 점차 경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추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볼 때, 현재까지는 지역적 양극체제가 상당히 이완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핵문제가 통일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 작용하면서 북핵문제의 향방에 따라 통일환경도 커다란 부침을 겪게 되었다.³³⁾ 이런 환경에서 한국 정치사회는 보수정권과 진보정권의 교체 반복과 더불어 통일노선 변화도 크게 경험하게 되었다.

김대중시대는 전반기(1998.2~2001.1)와 후반기(2001.2~2003.2)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반기는 1994년에 체결된 ‘북·미 제네바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이 순항되던 시기이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 최초의 진보정권인 김대중정권과 새천년민주당은 ‘햇볕정책’을

33)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상관성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엄상윤, “북핵문제와 남북한관계: 상관성과 함의,” 송대성·엄상윤·문순보·Efraim Inbar·Zachary Jutovich 편, 『북핵문제: 국제관계와 비핵화 방안』 (성남: 세종연구소, 2014), pp. 53-98 참조.

표방하고 이에 입각한 대북·통일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햇볕정책은 화해협력과 대북 지원, 특히 경제적 지원을 통해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³⁴⁾ 전반기의 햇볕정책은 한국의 주도 하에 남북협력 및 내세와 외세의 협력을 도모하고 주변국 모두에 우호적인 성격도 띠고 있었다. 따라서 전반기의 햇볕정책은 진보세력의 지배적 통일노선인 V-2유형이 아니라 V유형의 속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장면시대의 중립화통일론 이후 40여년 동안 한국 정치무대에서 사라졌던 V유형이 한국 정부의 통일노선으로 화려하게 부활한 것이다. 그러나 전반기의 햇볕정책은 장면시대 진보세력의 중립화통일론에 비해 ‘자주성의 정도’ 면에서는 내세적 역량, 특히 한국과 남북한의 주도적 역할이 크게 강화되고 ‘진영 편중의 정도’ 면에서는 미국진영에 다소 편중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틀에서 보면 장면시대의 V유형이 y축의 아래쪽으로 크게 이동하고 x축의 오른쪽으로 다소 이동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런 전반기의 햇볕정책에 북한도 적극 호응을 했고, 주변국들, 특히 미·중도 적극 지지·지원을 해주었다. 전반기의 햇볕정책은 한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도 받았다. 심지어 보수세력도 2000년 6월 1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즈음해서는 햇볕정책을 적극 지지해 주었다. 이런 점은 보수세력도 기존의 I 유형에서 벗어나 V유형을 선호함으로써 통일노선의 유형 자체를 교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반기의 통일환경은 전반기의 통일환경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2001년 1월에 등장한 부시(G.W. Bush)정권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대북 강경책을 적극 구사했고 북한은 여기에 크게 반발했다. 더욱이 2002년 10월에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문제가 불거지면서 2차 북핵위기가 개막되었다.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북·미 간에는 물론 미국진영과 중국진영 간의 대립과 갈등도 보다 심해졌다. 이처럼 후반기는 전반기와 달리 북핵 문제로 인해 통일환경이 크게 악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정권은 햇볕정책 추진을 고수했다. 문제는 통일환경의 변화로 햇볕정책의 성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후반기의 햇볕정책은 자주적 성격이 강해지고 북한과 중국

34) 햇볕정책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김학노, “평화통합전략으로서의 햇볕정책,”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5호 (한국정치학회, 2005), pp. 237-262; 이재호, 『대북정책의 다차원적 연계성과 햇볕정책의 효율성』 (서울: 고려대 박사논문, 2008) 참조.

진영에는 우호적이지만 미국진영에는 비우호적인 성격으로 변하게 되었다. 따라서 후반기의 햇볕정책은 V유형이 아니라 V-2유형에 속한다. 후반기에 와서 햇볕정책의 동력이 크게 떨어진 것은 이런 맥락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 햇볕정책에 대해 북한과 중국진영은 지지를 지속한 반면, 미국진영과 한국의 보수세력은 지지를 철회했다는 사실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한나라당을 위시한 보수세력은 북핵문제, 대북 비밀송금문제, 대북 저자세 등의 이슈를 부각시키면서 햇볕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대북 강경책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보수세력도 전반기의 V유형 선호에서 벗어나 기존의 I 유형으로 복귀한 것이다.

이처럼 김대중시대는 진보세력과 보수세력 모두 통일노선의 유형 자체를 교체하는 획기적 변화를 보여주었다. 김대중정권이 햇볕정책이라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전반기와 후반기의 통일노선이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틀을 적용하면, 전반기와 후반기는 통일노선의 유형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간파할 수 있다. 또한, 40여년 동안 잠들었던 V유형이 일시적으로나마 한국 정치사회의 지배적 통일노선으로 부활하여 국내외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V유형이 지배한 전반기에는 남남갈등이 거의 표출되지 않았던 반면 V-2유형이 지배한 후반기에는 남남갈등이 크게 표출되었다는 사실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시대는 2차 북핵위기가 계속되면서 전반적으로 통일환경이 악화된 상태에서, 북핵문제의 부침에 따라 통일환경이 극명하게 교차된 시기이다. 이런 환경에서 진보세력의 노무현정권과 열린민주당은 ‘평화변영정책’을 표방하고 이에 입각한 대북·통일정책을 적극 추진했다.³⁵⁾ 평화변영정책은 김대중정권의 햇볕정책, 특히 후반기의 V-2유형을 계승한 것이며, 김대중정권의 햇볕정책보다 자주적 성격이 훨씬 더 강화된 것이다. 노무현정권은 북핵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도 남북교류협력을 지속 확대했고 씨늘한 국민여론 속에서도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강행했다. 자주성 강화로 인해 노무현정권은 미국 및 보수세력과 커다란 마찰을 빚기도 했고 ‘자주냐 동맹이냐’의 논쟁을

35) 평화변영정책의 내용에 관해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평화변영과 국가안보』 (서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2004) 참조.

촉발시키기도 했다. 한편, 한나라당을 위시한 보수세력은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을 전면 부정하고 I 유형에 입각한 대북정책 추진을 강력히 주장했다.³⁶⁾ 보수세력은 각종 보수단체를 대거 결성하면서 보수세력의 결집력도 강화하기 시작했다. 노무현시대는 21세기에 접어들어 남남갈등이 가장 극명하게 표출된 시기이다.

이명박시대는 북한의 핵도발 심화와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 강화가 맞물려 6자회담이 공전되고 북핵문제 해법을 둘러싼 미국진영과 중국진영의 갈등이 고조된 시기이다. 이런 환경에서 보수세력의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진보정권들의 대북·통일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표방했다. 그러나 실제 대북·통일정책은 ‘비핵·개방·3000’에 입각한 것이다. ‘비핵·개방·3000’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에 적극 나서면 10년 내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달러에 이르도록 지원해주겠다는 것이다.³⁷⁾ 여기서 전제조건이 중요하다. 즉, 북한의 핵포기와 개혁·개방이 전제될 경우에는 화해협력과 대규모의 대북지원을 통해, 반대의 경우에는 대북 압박과 강경책 구사를 통해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전제조건 수용 거부에 따라 이명박정권의 대북·통일정책은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천안함 사태’와 ‘5.24조치’ 등에서 보듯이 거의 강경책 일변도로 구사되었다. 대북 압박과 강경책의 이면에는 북한의 급변사태를 조장·유도해서 한국 주도의 일방적·전면적 흡수통일을 이루겠다는 의도도 함축되어 있다.³⁸⁾ 이명박정권은 진보정권들을 거치면서 약화된 한미동맹을 재강화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었고, 실제로 한미동맹이 ‘글로벌 가치동맹’으로 격상되었다. 이처럼 이명박정권의 통일노선은 기존 보수정권들의 I 유형을 계승·부활시킨 것이며, 반복·친미적 성격이 한층 강화된 것이다. 이명박정권의 강경책은 북한의 강경책과 맞물려 남북갈등을 크게 고조시켰다. ‘5.24조치’ 단행으

36) 자세한 내용은 한반도 선진화재단 외교안보통일 패널, 『21세기 새로운 대북정책 패러다임』 (서울: 한반도 선진화재단, 2007) 참조.

37) ‘비핵·개방·3000’의 논리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엄상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과 남북한관계 전망,” 『평화학연구』 제9권 1호 (세계평화통일학회, 2008), pp. 5-20 참조.

38) “대한민국 통일은 아마 도둑같이 올 것”, “도둑이 뭐냐, 한밤중에 그렇게 올 수 있으니 항상 준비해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세계일보』, “통일, 도둑같이 온다”...李대통령 “오래 안 걸려”, 2011년 6월 21일.

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류협력이 중단되기도 했다.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미국진영과 중국진영이 기싸움·패싸움을 동반한 대대적 무력시위 대결을 전개하면서 지역적 양극체제가 일시적으로 크게 경화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을 위시한 진보세력은 V-2유형에 입각한 진보정권들의 통일노선을 지속하면서 이명박정권의 대북·통일정책을 강경하게 비판하고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묻기도 했다. 이처럼 이명박시대에도 남남갈등이 크게 표출되었다.

박근혜시대는 미·중 패권경쟁과 북핵 갈등이 보다 심화된 시기이다. 이런 환경에서 보수세력의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대북·통일정책으로 표방했다.³⁹⁾ 그런데 박근혜정권이 제시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은 기존의 보수정권들과 진보정권들의 대북·통일정책을 발전적으로 지양하는 제3의 대북·통일정책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 구상은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의 동시 병행, 대북 강경책과 온건책의 동시 병행 등을 강조하는 ‘동시병행 선순환 모델’을 차용한 것이며,⁴⁰⁾ 통일노선 면에서 볼 때는 V유형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실상”, 즉 실제 대북·통일정책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과는 판이하다. 박근혜정권의 실제 대북·통일정책은 거의 북핵문제 해결 우선과 대북 압박·강경책 일변도로 구사되었고, 이명박정권의 대북·통일정책과도 별 차이가 없는 I유형에 충실한 것이었다. 이처럼 박근혜정권은 표방 노선·정책과 실제 노선·정책 간의 괴리, 즉 I유형의 통일노선을 V유형의 통일노선으로 호도하는 ‘통일노선의 착시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국민여론을 의식한 ‘통일대박론’은 이런 착시현상을 배가시켜주었다. 다만, 2015년 ‘8.25 합의’와 이산가족 상봉, 한중관계 강화, ‘드레스덴 선언’ 등은 이명박정권의 대북·통일정책과 차별성을 보여주었고, 보수세력의 기존 통일노선이 x축의 왼쪽과 y축의 아래쪽으로 약간 이동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여하튼, 박근혜정권의 대

39)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통일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서울: 통일부, 2013) 참조.

40)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에 관한 심층 분석은 엄상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 파생효과와 개선방향』(성남: 세종연구소, 2013) 참조. ‘동시병행 선순환 모델’에 관해서는 박종철·김갑식·엄상윤·최수영·황지환, 『2000년대 대북정책 평가와 정책대안: 동시병행 선순환 모델의 원칙과 과제』(서울: 통일연구원, 2012), pp. 237-283 참조.

북 압박과 강경책은 경제건설 보다 핵무력건설을 우선한 북한의 ‘병진노선’과 맞물려 남북관계를 거의 시종일관 경색시켰다.⁴¹⁾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로 상징된 개성공단마저 폐쇄됨으로써 남북교류협력도 완전히 단절되었다. 한편, 민주당을 위시한 진보세력은 V-2유형에 입각한 진보정권들의 통일노선을 지속하면서 박근혜정권의 대북·통일정책을 강경하게 비판했다. 박근혜시대에도 남남갈등이 크게 표출되었다. 진보세력은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을 규탄하고 박근혜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의 촛불집회를 주도하기도 했다. 특기할 사안은 2016년 안철수를 중심으로 제3의 정치세력, 중도세력과 중도노선을 자처하는 국민의당이 창당된 것이다. 국민의당의 통일노선과 대북·통일정책은 V유형에 속하는 것이며,⁴²⁾ 김대중시대 전반기에 잠시 등장하고 사라졌던 V유형이 정치무대에 다시 등장한 것이다. 정치적 혈통은 다르지만 전반기의 김대중정권과 국민의당이 모두 V유형을 선호한 것이다. 그러나 2018년 바른정당과의 합당으로 국민의당이 해체됨으로써 V유형은 또 다시 정치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문재인시대에도 미·중 패권경쟁과 북핵문제 갈등이 지속되었다. 특히, 2020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팬데믹(COVID-19 pandemic)에 따른 국경봉쇄, 국내문제 해결 집중 등으로 인해 남북한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정상적 대외활동이 거의 마비된 상태가 지속되었다. 따라서 2020년 이후에는 여하한 한국의 대북·통일정책 추진도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통일환경에서 진보세력의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정권들의 대북·통일정책을 폐기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표방했다.⁴³⁾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진보정권들의 통일노선, 특히 그 명칭이 말해주듯이 노무현정권의 ‘평화번영정책’을 계승한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정권의 통일노선도 기본적으로 V-2유형에 뿌리를 둔 것이다.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평양선언’, 종전선언 추진 등이 말해주듯이 실제 대북·통일정책도 한국 및 남북한의 주도,

41) 2015년 8월 남북한의 ‘8.25합의’에 따라 2015년 10월 이산가족상봉 행사가 개최되었지만, 그 직후 당국자회담이 결렬되었다. 3개월에 불과한 이 시기를 제외하면 박근혜시대는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었다.

42) 안철수 지음, 제정임 엮음, 『안철수의 생각』 (파주: 김영사, 2012), pp. 151-159 참조.

43)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통일부,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서울: 통일부, 2017) 참조.

남북 화해협력과 분단개선, 대북 온건책, 북한 자극 자제 등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러나 ‘한반도 운전자론’과 북·미 핵협상 적극 중재,⁴⁴⁾ 미국과의 마찰 자제, 주한미군 사드배치 수용, 대북제재 국제공조 유지, 북한의 무력시위 비난 등의 면에서는 김대중정권 후반기 및 노무현정권의 대북·통일정책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본 연구의 분석틀에서 볼 때, 문재인정권의 통일노선은 기존의 V-2유형이 x축의 오른쪽과 y축의 위쪽으로 상당히 이동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런 변화는 문재인정권의 통일노선이 상당한 ‘우클릭’을 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문재인정권이 기존 진보정권들의 V-2유형 추진이 초래한 엄청난 후폭풍에서 교훈을 얻은 듯하다. 문재인정권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미국과 한국 보수세력의 반발이 그다지 심하지 않았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국민의힘을⁴⁵⁾ 위시한 보수세력은 기존 I 유형의 기조를 견지했다. 그러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 북한의 무력시위에 대한 대응 미흡 등 일부 사안을 제외하면 문재인정권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보수세력의 비판과 도전은 크게 약화되었다. 보수세력이 문재인정권 비판에 주력한 사안은 거의 국내문제였다. 따라서 문재인시대에는 남남갈등도 노무현시대에 비해 크게 약화되었다. 이는 문재인정권의 ‘우클릭’ 통일노선 이동과 코로나19 펜데믹에 따른 대북·통일정책 추진의 정체에 기인하는 바가 컸다고 할 수 있다. 중도세력과 관련해서는 탈이념·탈진영·탈지역·실용적 중도노선, 즉 V유형의 통일노선을 표방한 국민의당의 행보가 눈에 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의 주도 하에 2020년 2월에 재창당되었지만, 그 세력이 허약하여 한국 정치사회에서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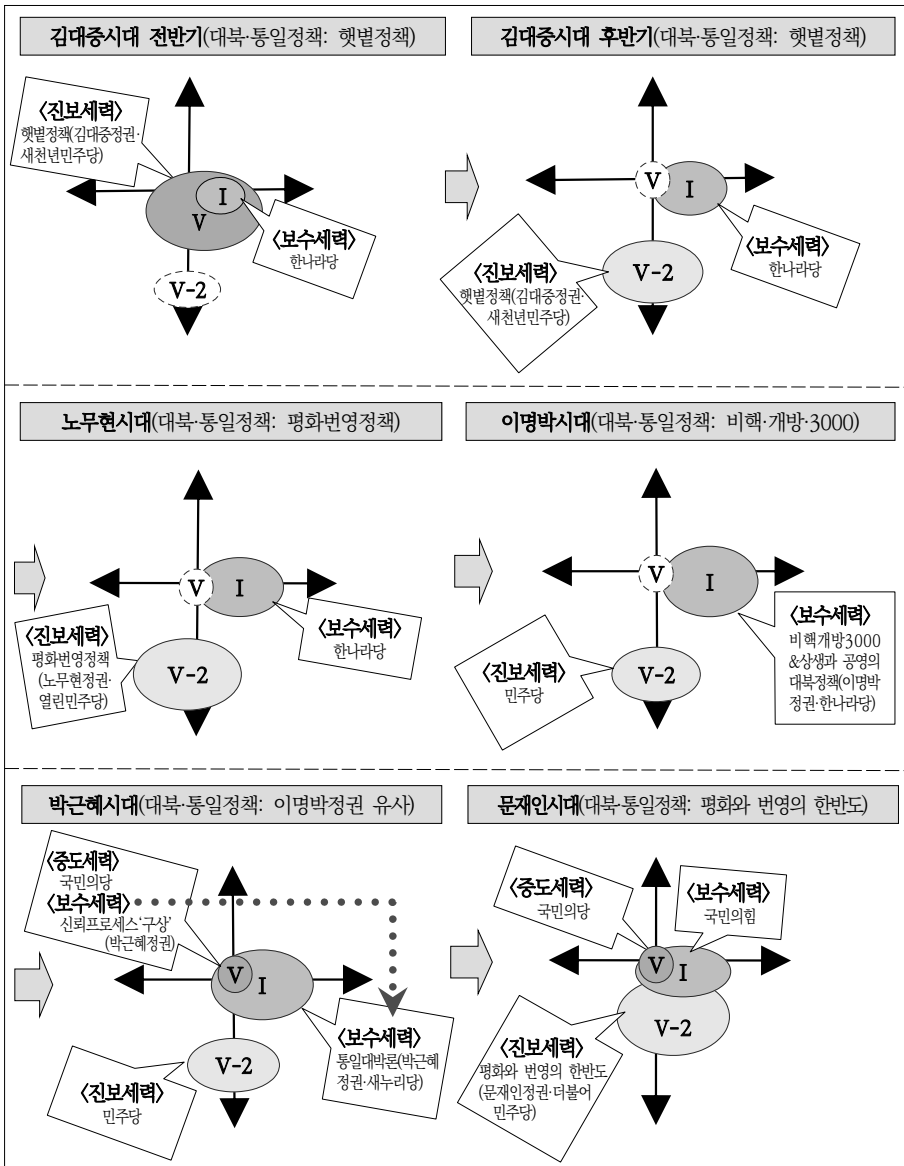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1세기는 미·중 패권경쟁의 점차 심화, 북핵문제의 부침,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의 정권 교체, 중도세력의 등장 등이 맞물려 한국 정부의 통일노선 및 대북·통일정책의 변화가 심했던 시기이다.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의 노선 이동에 따른 통일노선의 유형 변화와 통일노선의 착시 현상도 크게 노정된 시기이다. 21세기의 통일노선 계승·변화 양상을 간단히

44) 북·미 핵협상을 위해 2018년 6월 싱가포르 및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2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결렬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45) 박근혜정권 퇴진 이후 보수세력 제1야당의 당명이 새누리당→자유한국당→국민의힘으로 개칭되었다. 본 연구는 국민의힘으로 통칭한다.

표현해보면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김대중시대는 전반기와 후반기가 확연히 다른 바 2개의 그림으로 작성한다. 각 유형의 중첩 부분은 일부 정책의 유사성을 의미하는 바, 중심축의 이동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림 6> 21세기의 통일노선 계승·변화 양상



미·중 패권경쟁의 점차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긴 했지만, 21세기에도 한반도의 지역적 양극체제는 대체로 상당히 이완된 상태를 유지해 왔다. 북핵문제가 순항했던 탓도 있지만, 김대중정권 전반기의 V유형은 외세의 지원 획득, 집권경쟁력 확보, 남남갈등 약화, 분단개선 면에서 커다란 유용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지역적 양극체제가 상당히 이완된 상태의 통일환경과 크게 부합되는 통일노선은 V유형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김대중정권 후반기부터는 각 노선의 유형별 유용성과 한계가 크게 교차된다. 김대중정권 후반기와 노무현정권의 V-2유형은 분단개선에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고 중국의 지원 획득에는 다소 유용했지만, 미국의 지원 획득과 남남갈등 해소에는 커다란 한계를 노정시켰다. 이명박정권의 I유형은 미국의 지원 획득에는 매우 유용했지만, 중국의 지원 획득, 남남갈등 해소, 분단개선에는 커다란 한계를 노정시켰다. 박근혜정권의 I유형은 미·중의 지원 획득에는 다소 유용했지만, 남남갈등 해소와 분단개선에는 커다란 한계를 노정시켰다. 문재인정권의 V-2유형은 남남갈등 해소에는 매우 유용했지만, 분단개선과 미·중의 지원 획득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김대중시대 후반기부터는 북핵문제가 부침을 겪고 V유형을 선호하는 정치세력이 부재하거나 허약한 상태에서 보수세력의 I유형과 진보세력의 V-2유형이 대립·경쟁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집권경쟁력이 통일노선과 대북·통일정책에만 좌우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의 집권경쟁에서 V유형의 속성을 보다 많이 수용한 쪽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양상도 보여주었다. <그림 6>에서 보듯이 보수세력의 ‘좌클릭’과 진보세력의 ‘우클릭’ 경쟁을 통해 I유형과 V-2유형의 간극이 점차 좁혀지는 추세도 간파된다.

VI. 결론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서론에서 제기한 질문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정치사회의 통일노선 원형은 해방기의 임시정부수립 노선을 둘러싸고 3개의 정파에 의해 4개의 유형으로 정립되었다. 해방기의 우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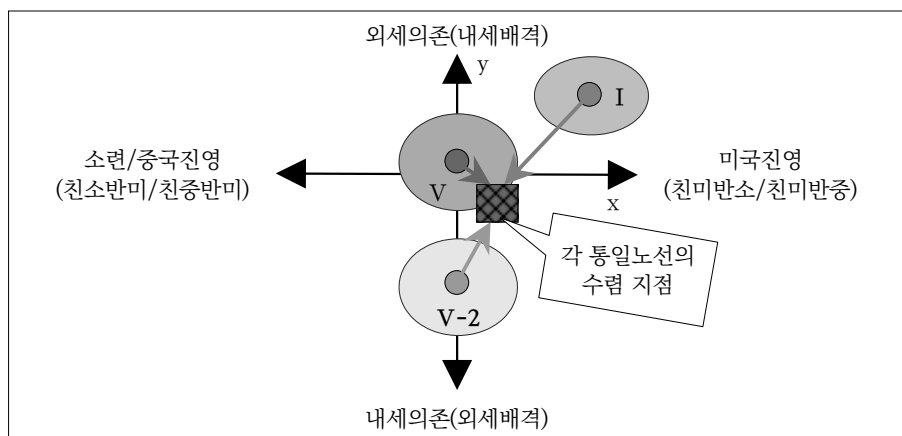
I 유형(친미·반소 외세의존형), 좌파는 IV유형(반미·친소 외세의존형), 중간파는 V유형(친미·친소 내외세절충형)과 V-2유형(반미·반소 내세의존형)을 제시했다. 단정수립 이후 한국 정치사회에는 I 유형, V유형, V-2유형만 남게 되었다. 대체로 보수세력은 I 유형, 진보세력은 V유형과 V-2유형을 계승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중간파와 진보세력은 외세의 지원과 협력을 기대할 때는 V유형, 그렇지 않을 때는 V-2유형을 구사하는 경향도 보여주었다.

둘째, 단정수립 이후 각 시기별·정권별로 통일노선의 계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냉전기에는 해방기의 임시정부수립 노선들이 각 유형별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통일방안, 대북·통일정책, 통일운동으로 계승·변화되었다. 국내외정세 변화, 특히 보수정권들의 통일논의 탄압에 따라 각 통일노선의 흥망성쇠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보수세력의 I 유형이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진보세력의 V유형과 V-2유형이 도전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V유형과 V-2유형은 5.16군부쿠데타 이후 정치무대에서 종적을 감추게 되었다. 박정희·전두환시대에 V-2유형의 진보세력은 통일문제 해결보다 민주화 투쟁을 우선하고 주도하는 양상을 보였다. 탈냉전기에는 보수세력의 I 유형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 가운데 I 유형과 V-2유형의 실천성이 크게 강화되었다. I 유형의 노태우·김영삼정권은 독일식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대북·통일정책을 적극 구사했다. V-2유형의 진보세력은 1980년대 후반 실천적 통일운동을 적극 전개했지만, 1990년 독일통일 이후에는 거의 침묵을 유지했다. 21세기에는 통일노선의 유형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이 전통적으로 선호했던 유형 자체를 교체하거나 유형의 속성을 크게 변화시키기도 했다. 김대중정권 전반기에는 40년 동안 잠들었던 V유형이 부활하여 한국 정치사회를 지배하기도 했고, 2016년 이후부터 V유형을 자처하는 중도세력이 등장하기도 했다.

셋째, 탈냉전 이후,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정치사회의 통일노선들이 점차 수렴되는 추세가 포착된다. 이는 정치세력별 통일노선들의 간극이 여전히 극심하다는 일반적 인식과는 큰 차이가 있다. <그림 7>에서 보듯이 해방기에 I 유형, V유형, V-2유형으로 크게 분화되었던 통일노선들의 중심축이 탈냉전 이후,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 V유형의 우측 하단으로 점차 이동을 하는 추세를 보인다. V유형의 중도세력이 부재하거나 허약한 상태에

서,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의 집권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보수세력의 ‘좌클릭’과 진보세력의 ‘우클릭’을 통해 I 유형과 V-2 유형의 간극이 점차 좁혀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주성의 정도’ 면에서는 한국의 국력 신장에 비례하여 외세의존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남북한, 특히 한국의 주도성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진영편중의 정도’ 면에서는 보수세력의 친미·반소(반중) 외교노선과 진보세력의 비미·비소(비중) 외교노선이 미국진영에 상대적으로 편중되는 수준의 친미·친중 외교노선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림 7> 한국 정치사회의 통일노선 수렴 추세



넷째, 통일노선의 착시현상도 많이 포착된다. 냉전기에는 보수정권들이 실제로는 현상유지를 추구하면서도 현실성 없는 통일방안과 통일구호를 표방하기도 했다. 탈냉전기 이후에는 통일노선과 통일방안·통일정책, 공식 통일방안과 실제 통일방안, 표방 대북·통일정책과 실제 대북·통일정책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다. 특히, 김대중정권 전반기의 햇볕정책과 후반기의 햇볕정책은 성격 차이가 확연하여 통일노선의 유형 자체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유형으로 오인되기도 했다. 박근혜정권은 V 유형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을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I 유형의 대북·통일정책을 거의 시종일관 구사함으로써 통일노선의 착시현상을 크게 유발했다.

다섯째, <표 2>에서 보듯이 단정수립 이후 각 통일노선의 유용성과 한계는 지역적 양극체제의 ‘경화 정도’에 따라 커다란 편차를 보여준다.⁴⁶⁾ 각 유

형별 편차는 물론 동일유형의 분석항목별 편차도 크게 노정된다. 대체로 지역적 양극체제가 경화된 냉전기에는 I 유형, 지역적 양극체제가 이완된 탈냉전기와 21세기에는 V유형의 유용성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이완기에 V유형이 부재하거나 허약한 경우에는, I유형과 V-2유형 중 ‘좌클릭’ 혹은 ‘우클릭’을 통해 V유형의 속성을 보다 많이 수용한 쪽의 유용성이 상대적으로 컸다고 할 수 있다.

<표 2> 지역적 양극체제의 ‘경화 정도’와 각 통일노선 유형의 유용성/한계

분석 항목		양극체제 통일노선	경화기(냉전기)			이완기(탈냉전기, 21세기)		
			I 유형	V유형	V-2유형	I 유형	V유형	V-2유형
집권경쟁력 확보			상	하	하	중	상	중
외세의 지원 획득	미국진영		상	하	하	상	상	하
	소/중진영		하	중	상	하	상	상
남남갈등 해소	권위주의정권		상	-	-	-	-	-
	민주정권		하	-	-	하	상	하
분단개선			하	-	-	하	상	상

통일을 원한다면, 통일노선의 계보 및 각 통일노선의 유용성과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여 통일환경과 부합되는 통일노선을 발굴·정립하고 그런 통일노선에 입각한 통일방안과 대북·통일정책을 적극 개발·추진해야 한다. 미·중 패권경쟁이 점차 심화됨에 따라 한반도의 지역적 양극체제도 점차 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지역적 양극체제가 상당히 이완된 상태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상태와 가장 크게 부합될 수 있는 통일노선은 V 유형이다.⁴⁷⁾ 북핵문제가 분단개선과 통일문제 해결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북핵문제는 고정불변의 상수가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북핵문제의 향방이 달라질 수도 있다. 한국 정치사회에서 합의된 통일노선을 도출·정립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한국 정

46) 해방기는 현재의 분단상황과 사뭇 다르기 때문에 각 통일노선의 유용성과 한계 분석·평가를 통한 시사점 도출의 의미도 제한적인 바 여기서는 제외한다. 해방기의 각 통일노선의 유용성과 한계는 II장의 분석내용을 참고하길 바란다.

47) 지역적 양극체제의 ‘경화 정도’와 통일노선의 유형별 적실성에 관한 자세한 분석은 엄상윤 (2005), pp. 22-29 참조.

치사회의 통일노선은 그 유용성을 크게 보여준 김대중정권 전반기의 ‘햇볕정책’과 박근혜정권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처럼 V유형의 속성을 대거 수용하는 방향에서 재정립되어야 한다. 그래야 21세기의 통일환경과 크게 부합되는 통일방안과 대북·통일정책의 개발·추진도 기대해볼 수 있다.⁴⁸⁾ 이런 면에서, 한국 정치사회의 통일노선들이 V유형의 우측 하단으로 수렴되는 추세는 고무적 현상이다.

그러나 V유형에 속하는 통일노선들에는 ‘총체적 성공과 총체적 실패’의 가능성이 동시에 내장되어 있다.⁴⁹⁾ 예컨대,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의 병행, 대북 강경책과 온건책의 병행,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의 조화 등과 같이 상충되는 현안들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만 V유형의 통일노선을 추구한다고 해서 유용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김대중정권 전반기의 햇볕정책처럼 북한도 V유형에 적극 호응하고 외세들도 V유형을 적극 지원해줄 때 획기적 분단개선과 통일실현의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다. 따라서 V유형의 성공적·지속적 운영은 험난한 가시밭길이고, I유형이나 V-2유형의 운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힘들다. 그런 만큼 고도의 지혜와 부단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48) V유형의 통일노선과 크게 부합되는 대북·통일정책의 모델로 필자가 개발한 ‘동시병행 선순환 모델’이 있다. 박종철 외 (2012), pp. 237-283 참조.

49) V유형의 유용성과 한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엄상윤 (2005), pp. 26-29 참조.

[참고문헌]

- 강원택. “한국의 이념 갈등과 진보·보수의 경계.” 『한국정당학회보』 제4권 제2호 (한국정당학회, 2005).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평화변영과 국가안보』 (서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2004).
-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각계통일논의자료집』 I·II·III (서울: 국토통일원, 1988).
- 국토통일원. 『한국통일방안의 변천과정』 (서울: 국토통일원, 1969).
- 김경미.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에 대한 이론적 좌표설정 모색.” 『정치정보연구』 제12권 1호 (한국정치정보학회, 2009).
- 김근식. “노무현정부의 평화변영정책: 구상과 현실 그리고 과제.” 『통일문제연구』 제16권 제1호 (평화문제연구소, 2004).
- 김영명. 『한국의 정치변동』 (서울: 을유문화사, 2006).
- 김영재. “남북한 정부의 통일정책 분석.”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2집 1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0).
- 김학노. “평화통합전략으로서의 햇볕정책.”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5호 (한국정치학회, 2005).
- 노중선. 『민족과 통일 I (자료편)』 (광주: 사계절, 1985).
- _____. 『연표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50년』 (광주: 사계절, 1996).
- 박순성·최진욱. 『통일논의의 변천과정』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박종철·김갑식·엄상윤·최수영·황지환. 『2000년대 대북정책 평가와 정책대안: 동시병행 선순환 모델의 원칙과 과제』 (서울: 통일연구원, 2012).
- 백학순. 『박근혜정부의 대북·통일정책: 역대 남한정부의 대북·통일정책과 비교』 (성남: 세종연구소, 2018).
- 신영석. 『역대정권의 통일정책 변천사 1948~2008』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08).
- 심지연. 『남북한 통일방안의 전개와 수렴』 (파주: 돌베개, 2001).
- 안철수 지음, 제정임 엮음. 『안철수의 생각』 (파주: 김영사, 2012).
- 양영식. 『통일정책론: 이승만정부로부터 김영삼정부까지』 (서울: 박영사, 1997).
- 엄상윤. 『제2공화국시대의 통일논쟁』 (서울: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1).
- _____. “제2공화국시대의 중립화통일론과 21세기의 한반도통일: 맨스필드·김삼규·김용중의 논리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3집 2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3).
- _____. “한반도 통일의 이론적 모색: 지역적 양극체제와 약소국의 분단/통일.” 『국제관계연구』 제10권 제2호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05).
- _____.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과 남북한관계 전망.” 『평화학연구』 제9권 1호 (세계평화통일학회, 2008).
- _____. “제1장 한국인의 대외인식: 지속과 변화.” 이기완·엄상윤·양순창·조철호·우평균·황기식·이순주·한양환. 『국제사회의 대외인식과 한국관』 (서울: 매봉, 2009).

- _____.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 파생효과와 개선방향』 (성남: 세종연구소, 2013).
- _____. “북핵문제와 남북한관계: 상관성과 함의.” 송대성·엄상윤·문순보·Efraim Inbar·Zachary Jutovich. 『북핵문제: 국제관계와 비핵화 방안』 (성남: 세종연구소, 2014).
- 윤민재. 『중도파의 민족주의운동과 분단국가』 (서울: 서울대 출판부, 2004).
- 이재호. 『대북정책의 다차원적 연계성과 햇볕정책의 효율성』 (서울: 고려대 박사논문, 2008).
- 이정우. “한국 통일정책의 전개과정: 현실주의적 해석의 관점에서.” 『북한연구학회보』 제 15권 제2호 (북한연구학회, 2011).
- 이호재·정광하·송대성·엄상윤·남광규·이현경. 『한국적 국제정치이론의 모색: 해방기 정치 지도자들의 대외인식과 외교논쟁 사례를 중심으로(1945-1948)』 (서울: 화평사, 2005).
- 이호재. 『한국외교정책의 이상과 현실』 (서울: 법문사, 2000).
- 최봉윤. 『민족통일운동사: 민중적 통일운동의 전개를 위하여』 (서울: 한백사, 1988).
- 최장집. “한국전쟁에 대한 하나의 이해.” 최장집 편. 『한국전쟁연구: 한국현대사의 이해 I』 (서울: 태암, 1990).
- 통일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서울: 통일부, 2013).
- _____.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서울: 통일부, 2017).
- 한반도 선진화재단 외교안보통일 패널. 『21세기 새로운 대북정책 패러다임』 (서울: 한반도 선진화재단, 2007).
- 홍석률. 『통일문제와 정치·사회적 갈등: 1953-1961』 (서울: 서울대출판부, 2001).
- 황지환. “진보 대 보수의 대북정책, 20년 이후.” 『통일정책연구』 제26권 제1호 (통일연구원, 2017).

- Fox, Annette B. *The Power of Small States: Diplomacy in World War II* (Chicago: Univ. of Chicago, 1950).
- Hnadel, Michael. *Weak States in the International System* (London: Frank Cass, 1981).
- Kaplan, Morton A. *System and Process in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57).
- Morgenthau, Hans J. *Politics Among Nations*(5th ed.) (New York: KNOPE, 1973).
- Singer, Marshall. *Weak States in a World of Powers: The Dynamics of International Relationships* (New York: The Free Press, 1972).
-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ssachusetts: Addison-Wesley Publishing Co., 1979).

〈신문〉

- 『세계일보』. “‘통일, 도둑같이 온다’...李대통령 “오래 안 걸려.” 2011년 6월 21일.

[ABSTRACT]

Genealogical Continuation and Change of Unification Lines in Korean Political Society

Sang-Yoon Eom | Lecturer, Yonsei University

This article analyzes the genealogy of various unification lines that have appeared in Korean political society from the liberation period to the 21st century by the viewpoint of continuation and change, and suggests implications for the re-establishment of future unification line. For these purposes, this article attempts to typologize various unification lines according to the mechanism in which division or unification of a weak state is operated under the regional bipolar system.

The conclusions of this article are as follows. First, the original unification lines of Korean political society were established by three political factions in the liberation period as four types: the I-type(the foreign dependence type of pro-U.S. but anti-Soviet Union, the right-wing), the IV-type(the foreign dependence type of anti-U.S. but pro-Soviet Union, the left-wing), the V-type(the internal and foreign cooperation type of pro-U.S. and pro-Soviet Union, the middle-wing), and the V-2-type(the foreign exclusive independence type of anti-U.S. and anti-Soviet Union, the middle-wing). Second, in the Korean political society after the establishment of division governments, the conservatives inherited the I-type, but the progressives inherited the V-type and the V-2-type.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change in the genealogy of unification lines through the Cold War period, the post-Cold War period, and the 21st century. Third, after the post-Cold War, the unification lines of Korean

political society have gradually converged in the direction of approaching the V-type. This is different from the general perception of Koreans. Fourth, there has been a great deal of illusion phenomena which actual unification policies are inconsistent with the slogan unification line. Fifth, the usefulness and limitations of each unification line have showed a great correlation with the loose or tight degree of the regional bipolar system. The convergence of unification lines into the V-type is encouraging. But the successful and continuous operation of the V-type requires high techniques and constant efforts.

Key Words: unification line, genealogy, conservative, progressive, political society

투 고 일: 2022.04.15.

심 사 일: 2022.05.08.

게재확정일: 2022.05.11.